‘청목회 입법로비’ 소환조사 여야 입장차

與 “檢 소환 응할 것” 野 “공작 협력 안해”

檢-야권 대치 격화… 박지원 “영장 사본은 위법”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국회의원들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한 반면 야당 측에서는 이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검찰과 야권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지역후원회 사무실의 전직 회계책임자인 장모씨와 같은 당 권경석 의원 지역후원회 사무실의 전 회계책임자 조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오간 ‘후원금’ 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는 한편 야당 보좌진들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하게 대처하라.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며 강공을 예고하고 나서 정치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야 의원과 국회 모두를 마치 어려운 사람에게 돈 받아먹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공작에 절대 협력할 수 없다”고 소환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만들어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의 법률적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국회 유린 압수수색 영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포괄 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장의 정본을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영장의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불법적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사용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정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단 1부만이 정본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사본인 종이 한 장을 제시하며, 공권력의 허세를 부리며 국회를 한껏 유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관련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며 “이는 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로부터 10만~20만원씩 떼서 모은 로비자금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적은 옳다”며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국민여론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檢 ‘입법로비’ 與의원 회계책임자 소환

민주 최규식·강기정측 거부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9일 오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지역후원회 사무실의 회계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 측의 전 회계책임자 조모씨도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출석한 회계담당자들을 상대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금된 경위와 법 개정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은 지난 5일 현역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나흘만이다.

검찰은 의원 11명 측의 사무실 회계담당자 모두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최규식·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 측은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 측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일정이 안 맞는다며 검찰과 출석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주 ‘압수수색’ 총공세

대응수위 강온 ‘딜레마’

검찰의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청목회 수사를 놓고 민주당이 소환 불응 카드까지 내세우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응수위를 놓고는 속내가 복잡하다.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일에도 검찰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문제를 전광석화처럼 덮어버리려 하는 데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총리실 국무차장 출신으로 야당이 불법 민간인 사찰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의 최근 아프리카 출장을 언급하며 “대포폰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기업 비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수사 국면 등을 전환하려고 박 차관과 칠곡 동향으로, 대구 오성고 후배인 이창세 북부지검장에게 수사를 맡겨 국회를 희생양 삼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현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포폰게이트를 덮으려는 정치검찰의 정치말살 불법수사는 아무리 덮고 가리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범죄 은폐의 죄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응의 한 켠에는 조바심이 드러난다. 강공만 고집하다가 자칫 여론이 악화하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1월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때도 당 차원에서 영장집행 거부로 맞섰다 여론이 악화하자 김 전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쪽으로 선회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 개최가 받아들여지자 애초 방침에서 양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의 순차 처리와 현안질의 후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정상화를 합의했다.

그럼에도, 아직 민주당에는 강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강창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여론에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차원의 싸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치자금 개선 소위 구성

국회 행안위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의 칼끝이 소액 후원금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책을 만들기로 합의한 만큼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해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 구성안’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이 맡고 위원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통법 오늘, 상생법 25일 처리

박의장-6당 원내대표, 예산국회 정상화 합의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여야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가진 뒤 SSM(기업형슈퍼마켓) 쌍둥이 규제법안 중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상생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 내에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여전히 강해 이번 정기국회가 계속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사용, 검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여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UAE(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있다.

이날 회동에선 긴급 현안질문의 경우 정원을 정하지 않되 야당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야당이 요구한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 검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SSM 규제법안 중 유통법은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상생법 통과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되 현안법안 중 1호 법안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상생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12월2일 통과를 주장해왔으나, 오늘 국회의장-원내대표간 간담회에서 25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정당·인권시민단체 공동결의대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규칙 개정 정당” “○○○ 발언 창피”

여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의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가 아닌 전원위에서 주요 사안을 의결하도록 한 운영규칙 개정안에 반발하며 상임위원장 2명이 사퇴한 것과 관련, 인권위 활동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현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운영규칙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현 위원장을 옹호하고 최근 인권위 파행 사태를 일부 세력의 ‘현병철 흔들기’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에 현 위원장은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인권위원장이 ‘깜둥이’라고 발언하고 많은 사람이 사퇴하라는데도 교회에 가보니 자기를 칭찬한다고 하는 게 창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 현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들어오자 조직적인 흔들기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권성동 의원은 “사퇴한 상임위원 2명은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과 한나라당 추천 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위원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퇴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촉구 정당·인권시민단체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